‘채용 비리 복마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자격 갖춘 지원자 안뽑고 채용 규정 어겨 서류 서면결재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차량 운전원 분야 무관 보직 발령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의 채용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국민·광산4)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채용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채용계획과 절차, 불명확한 내용을 담은 채용공고, 이해할 수 없는 면접 과정, 비전문적인 직원 채용 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진행된 채용과정에서 공사가 규정을 어기고 모든 채용 관련 서류를 서면결재했고, 서류 전형 5배수 제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최대 33배수의 합격자를 양산했고, 한 번 채점된 점수를 보정하는 등 면접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자 보직 배치에서도 모집 분야와 상관없이 임원실 비서직으로 2명을 보직 변경 배치했으며, 사장 차량 운전요원도 기존 무기계약직 분야에 있지도 않은 보직으로 발령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는 기존 비서를 다른 부서로 보내고, 10여 년 동안 차량운전만 해온 직원도 사무직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또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가량이 지난 후 공사 규정을 개정, 역무 미화직을 2명 감원하고 기존에 없던 비서직 2명의 정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원조정에 따라 현장 인력인 미화직은 2명 줄고, 비서직은 2명 증가했다.

김 의원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은 외면한 채 공사 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뽑았다면 비리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주경님(민주 ·서구4) 의원도 상식을 벗어난 채용에 대해 질타했다. 주 의원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1회로 진행됐고 1차 서류전형에서 565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전체를 합격시켰다”면서 “하지만 2차 면접은 3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면접위원들에 의해 진행돼 동일평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도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전공까지 고려하지 마라’는 내용은 없음에도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대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4명의 응시생 중 1명을 제외한 23명 모두 불합격처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의 지하역사에서 근무하며 인력난으로 연차도 못 쓰고 있는데, 사장은 비서를 2명이나 두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채용시스템이 있는데도 구태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채용을 무책임하게 진행해 ‘채용비리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학연, 혈연, 지연 채용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실시됐다”면서 “면접 문항도 150여 개나 제공돼 난이도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윤장현 광주시장, 명예 익산시민 된다

이리역 폭발사고때 군의관 현장 달려가 부상자 치료

윤장현 광주시장이 명예 익산시민이 된다. 광주 국군통합병원 군의관으로 일했던 1977년 징계를 무릅쓰고 이리역 폭발사고 현장에 달려가 의술(醫術)을 펼쳤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 시장은 오는 11일 오후 익산역에서 열리는 ‘이리역 폭발 40주년 추모행사’에 참석,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명예 익산시민증을 받는다. 〈관련기사 13면〉

익산시는 “1977년 11월11일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군의관으로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민첩한 초동대처로 많은 생명을 살렸다”면서 “평생을 생명존중·사람중심의 ‘인본주의’ 가치를 안고 살아온 윤 시장의 삶에 존경을 표한다”고 명예 시민증 수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익산 민예총은 다큐멘터리 ‘이리 화약연화’ 제작자료 수집 차원에서 윤 시장과 인터뷰를 갖고 이리역 폭발사고 상황, 의료지원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터뷰에서 윤 시장은 “당시 광주 국군통합병원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던 중 TV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위생병과 간호부사관 20여 명을 모아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고했다.

윤 시장은 “당장 출동해야 하는데 병원장과 연락이 안 되고 당직사령은 명령 없이는 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이리역 근처까지 가서 인근 남성고등학교 강당에 의료장비를 펼치고 구호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감’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생명이 먼저라는 평소의 철학대로 부상자를 치료하며 뜬눈으로 날을 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다행히 다음날 현장을 찾은 군 고위 간부들이 ‘가까운 곳도 아닌 광주에서 빨리 출동해 초동대처가 잘됐다’며 격려해줘 덕분에 공식적으로 의료텐트가 차려지고 3개월에 걸쳐 부상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익산 민예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40주년 추모행사에서 상영한다.

신귀백 익산 민예총 회장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의 안타까운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 익산의 새로운 미래를 맞고자 제작하게 됐다”며 “민첩한 판단력으로 ‘선조치’를 감행,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익산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윤 시장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추모행사추진위원회에서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줄줄 새는 광주 상수도관

파열로 연간 누수발생 건수 1000건 육박

유수율 특·광역시중 가장 낮아

광주지역 상수도관의 잦은 파열로 수돗물 공급량 대비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인 유수율(有收率)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광주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9월말)까지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발생 건수는 모두 2444건에 달했다.

지난 2015년 953건이었고 지난해는 886건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올해는 9월말까지 605건 발생했다.

급·배수관 부식이나 균열이 1697건으로 3건 중 2건에 달했으며, 접합부 누수 707건, 다른 공사 도중 파열된 경우가 41건이다.

긴급 누수복구와 사용하지 않는 관정비, 상수도관 주변 시설물 정비 등 복구건수도 3천365건에 금액만 47억 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유수율은 86.2%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가 95.3%로 가장 높고 대전시 93.7%, 부산시 92.7%, 대구시 92.5%, 울산시가 90.1%로 90%대를 유지했으며 인천시 89.9%였다.

하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교체 대상 노후관 665km 중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반에 못 미친 315km 교체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교체했거나 할 계획인 물량이 14㎞와 18.3㎞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올 259개 기업 3조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가 올해에만 3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투자가 실현된 것은 158개 기업, 1조3000억원 규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59개 기업과 3조888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1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것을 신호탄으로 한섬피앤디의 고흥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1100억원), 캠시스의 영광 대마 산단 전기차 공장 건립(2100억원) 등 굵직한 협약이 이어졌다.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2만4000개로 추산했다.

실제 전남에서는 2012년 이후 투자협약 가운데 158개 기업이 1조3063억원 투자를 실현했다. 협약 대비 실현율은 46.4%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전남도는 분양가의 30%가량인 입지 보조금 외에 시설·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으로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투자기업 지원금은 2014년 31건·50억원에서 2015년 43건·231억원, 지난해 65건·224억원, 올해 9월까지 92건·271억원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나주 신재생 에너지, 영광 전기차 등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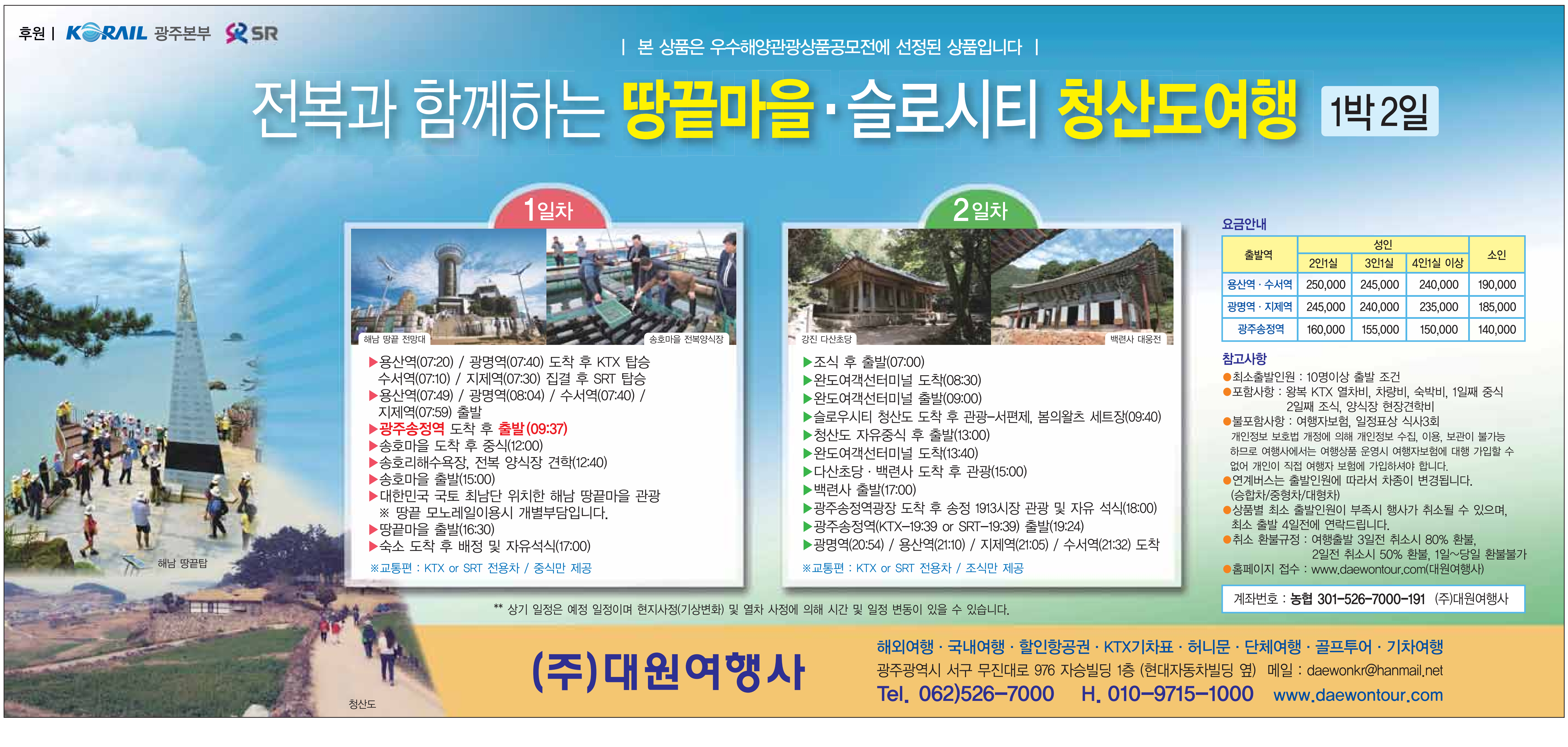
김기홍 전남도 투자유치담당관은 “지역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기업에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이 좋은 구매처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 시군 태양광시설 개발 허가기준 제각각

임영수 도의원 지적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전남도 건설도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성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순천시 등 12개 시·군은 예규·훈령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안군은 지난 8월 지침을 폐지했으며, 목포시는 별다른 기준이 없는 등 22개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제각각 달라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다”며 “전남도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각 자치단체별 특색을 고려해야 하나, 무분별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